

5·18망언에 면죄부...“국민 우롱한 징계쇼”

한국당, 3인방 ‘맹탕징계’ 반발

5·18단체 한국당 규탄 공동성명
사과·5·18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여야4당 비난 “국회서 퇴출 시켜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5월 단체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등 광주 민심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5·18 망언 국회의원들에게 송방망이 징계를 내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정당 대회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더니 겨우 3개월 당원권 정지와 경고로 국민을 우롱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치소로 열버린 한국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당이 5·18기념식과 광주를 기웃거리는 행태 또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의 송방망이 징계 거부와 함께 김순례·김진태 의원의 국회 퇴출, 자유한국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발표, 5·18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징계를 규탄하며 강하게 분노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자 5·18 유공자이기도 한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은 논평을 통해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 송방망이 징계로 또다시 국민을 모욕했다”며 “망언 이후 국민적 저항이 거세자 압박 앞드리더니 결국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국민을 모독하고 아물지 않은 상처에 생채기를 냈다”면서 “황 대표는 과거로 가는 자유한국당을 멈춰 세우지 못하며 결국 누구나 예상 가능한 대표로 머물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망언 당사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은 자유한국당이 반역사 반민주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국가 정당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면 망언 3인방을 제명하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출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도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 동포오찬 간담회 중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리소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수소·인공지능·e-모빌리티·에너지 산업 광주·전남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적극 지원”

오늘 광주 방문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강소기업 육성 현장 소통 가장 중요
광주형일자리는 혁신성장 첫 모델”
창조혁신센터·송정역 시장 등 찾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광주의 수소산업·인공지능(AI) 산업, 전남의 e-모빌리티·에너지 산업 등이 미래 광주·전남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이러한 신산업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며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22일 광주를 방문해 창조경제혁신센터, 1913 송정역 등을 직접 방문해 광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을 만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안사항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현장 소통 행보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된다”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과 소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간 연결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작은 것을 연결해 강한 힘을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비결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경제 혁신성장 개척 모델로 꼽았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산업구조의 가파른 변화 속에서 노사 상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의 바탕에는 광주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큰 응원이 되었을 것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융자, 보증, 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번 광주 방문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 변화와 확대,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대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지역 창업 생태계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중기부 정책 철학의 근간인 상생과 공존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또한, “향후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혁신센터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4차 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의 산실이 되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면서 “이번 광주 방문은 이를 점검하고 확산하는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1913 송정역시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송정역 시장은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협력 모델 중 하나”면서 “송정역 시장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각 지역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됐다는 말을 듣기 위해 신명나게 일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4~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구축, 창업벤처와 스마트 제조혁신 등 혁신성장,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 정책 영역 공고화 등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께 성과로 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도시인 만큼 앞으로도 상생의 경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광주·전남지역이 해 주기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광주를 자주 찾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7 창사67주년 광주일보

MG 새마을금고

누구든! 언제든! MG새마을금고로 든든하게!

걱정보다 기대가, 불안보다 안정이 커지는
MG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도시인 만큼 앞으로도 상생의 경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광주·전남지역이 해 주기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광주를 자주 찾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